

특별기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앞으로 나아갈 길



표범식
광주 북구의회 의장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과 미비한 제도로 인해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겪어온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정한 지방자치기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협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월,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어 오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방자치 역량강화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의회 소속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인사권 독립 부분은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기관대립형...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북구의회도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1월 의회제도개선준비단을 구성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추진을 건의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및 의회 행정기구를 논의했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30여 개에 이르는 조례와 규칙을 정비하는 등 지방의회가 한층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대적인 변화에 대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

집행부 견제·감시 강화

그동안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소신껏 일할 수 없었던 의회 직원들은 인사권 독립으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한편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우리 북구는 지난 2010년 재정 규모가 3,500억이었는데,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재정 규모를 확보해 10년 만에 3배가 늘었다. 늘어난 재정 규모와 함께 집행부의 인력도 2010년 879명에서 지난해 1,256명으로 10년 전보다 377명이 증가했다. 반면, 북구의회 사무국 정원은 2010년 21명에서 현재 26명으로 단 5명 늘어난 것에 그쳤다. 집행부의 재정과 조직 규모가 커진 것은 그만큼 행정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대된 집행부의 역할만큼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의회의 역할도 분명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구의회 조직의 규모와 인력은 집행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동안 의회는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인사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강(綱) 지방자치단체, 약(弱) 지방의회의 구도를 깨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예산편성권도 지방의회에 주어져야 한다. 변화된 지방자치 시대를 맞는 의회의 조직과 그에 걸맞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은 인사권은 극히 제한...

적일 수밖에 없어 결국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라는 취지는 무색해질 것이다. 흔히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와 같은 관계라고 비유한다. 하지만 인사권과 함께 예산과 조직권이 없다면 여전히 수레바퀴의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어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직·예산편성권 확대 필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이제는 외형적인 분리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통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가 가지는 풀뿌리 민주정치 실현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직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해 그동안 집행부에 쏠린 힘의 균형을 조금씩 되찾고 불완전하게나마 지방의회의 독립성은 강화되며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현실화 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의회에 부여하는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통해 다가올 자치분권의 대물결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기고

포용도시를 위한 여수 대전환



민덕희
여수시의회의원

모두를 위한 도시는 '도시'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유재로 규정하면서 모든 도시의 거주자들에게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공유재로서의 도시를 말한다. 다시 말해 남녀노소, 장애인, 임산부에 상관없이 도시에 거주하고 도시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양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일컫는다. 지난 2016년 10월 에라도르 수도 키토에서 열린 유엔 헤비타트 3차 회의에서 새로운 도시 아젠다를 논의하고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정주에 관한 키토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는 앞으로의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와 생계를 위한 토지와 도시공간의 탈상품화, 둘째 도시공유지, 공공공간 확보, 셋째 회복력, 기후변화, 재난관리, 넷째 포용적 거버넌스, 다섯째 포용적 도시계획, 여섯째 참여권한 부여, 투명성, 민주화, 일곱째 경제성장보다 주민의 생계와 복지 우선, 여덟째 포용적 경제 및 연대경제, 아홉째 안전한 도시 등을 제시했다. 헤비타트 3차 회의에서 핵심은 제시된 정책 단위 중 첫 번째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다루면서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 도시는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유재라는 것, 모든 도시의 거주자들에게 정의롭고 포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공유재로서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세대에게도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주도의 도시계획과 공유재로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키토선언으로 인해 인종이나 성별, 장애여부, 교육수준 또는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포용도시'라는 개념을 탄생시켰다.

도시화의 과정에서 일부 계층 또는 지역의 사회적 배제, 지역 간의 불균형과 양극화가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포용도시는 이러한 지역 불균형과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적인 형평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세계 여러 도시에서 정책방향을 수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 가장 먼저 포용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서울은 사람, 공간, 거버넌스 측면에서 포용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영역에서는 '배제에서 포용', 도시공간과 도시서비스의 영역에서는 '보편적 접근', 도시개발과 경제성장 영역에서는 '혜택의 공유', 정책과정에서는 '시민의 참여'라는 4가지 포용도시 정책방향을 도출했다. 우리 여수도 포용도시를 위한 정책 전환이 절실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도시를 상품이 아닌 모두를 위한 공유재로 인식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한 하드웨어 중심의 성장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휴먼웨어, 소프트...

웨어 개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도시는 문제의 덩어리가 아니라 해결책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도시 문제는 성장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문제 발굴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책임의 방향이 필요하다. 도시는 시장이나 도시의 사회적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시민 등의 몇몇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의 책임도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시민 공감감이 필요하다. 넷째, 적극적으로 세세한 행정이 필요하다. 도시 전반에 대한 불변한 사항은 없는지, 개선하거나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없는지,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한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인구절벽, 지방소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도시를 바라보는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상품가치로서 개발을 통한 도시발전에서 벗어나 도시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소소하지만 세심한 행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전장에 부착하지만 하면 된다. 주택에서 소화기는 물이 가득 찬 소방차와 같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365일 화재를 감시하고 알려주는 경비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선군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특지광장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의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연평균) 전국적으로 화재가 4만365건 발생해 매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39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중에서 전체 화재 사망자의 55%가 주택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인 0-6시에 사망자의 33%로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였다.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시간에 발생했을 경우 화재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불이 났을 때 감지해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가 있다.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물'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전장에 부착하지만 하면 된다. 주택에서 소화기는 물이 가득 찬 소방차와 같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365일 화재를 감시하고 알려주는 경비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한선군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39
- ▲미아·기출신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3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고콜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 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용남 편집국장姜賢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처 부 (062) 720-1060-62 경 제 부 (062) 720-1066-67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사 회 2 부 (062) 720-1043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전 부 (062) 720-1040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TEL (062) 720-1073 * FAX (062) 720-1006 * 전 산 실 (062) 720-1033 * 월 간 국 (062) 720-1007 * 판 매 국 (062) 720-1004 * 사 업 국 (062) 720-1011,1099 * 광 고 국 (062) 720-1016-17 * 관 리 국 (062) 720-1012 * 기사제보 * TEL (062) 720-1050-53 * 시화부품 010-5601-2219 * FAX (062) 720-1080 * E-mail jndn@chol.com * 광고문의 * TEL (062) 720-1016-17 * FAX (062) 720-1020 *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인재 집결’ 켄텍 성공적 개교 기대

오는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에 전국 인재들이 모여들고 있다. 최소 그린모습을 보여주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2022학년도 정식 일반전형 마감 결과 10명 모집에 953명이 지원해 95.3대 1을 기록했고, 정식 모집에 앞서 실시된 수시모집(90명 선발)에서도 2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다. 지원 경쟁률만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선부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100대 1에 가까운 경쟁은 켄텍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한다. 특히 최고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은 상위권 학생이 많이 지원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수학, 과학' 2개 영역을 합해 3등급 이내와 영어 2등급 이내다. 지난해 실시된 역대급 불수능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켄텍 측도 지원 경쟁률에 매우 고무적이었다. 윤의준 총장은 "높은 지원율은 교육혁신을 통해 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탄소중립달성을 위해 핵심 에너지 기술을 추구하는 켄텍의 진정성과 가능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서 인정해주신 결과"라고 평했다. 학교 측은 앞으로 학생과 학부모 기대를 충족하는 강의와 교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제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된 켄텍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대학으로 글로벌 톱10 공과대학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5월 착공해 오는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연구시설과 인력 측면에서 가야 할 길이 멀다. 수일 전 김영록 전남지사가 학교 건설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살핀 것은 시의적절하다. 두 달 뒤 개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학교 측과 지역민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보완 시급하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산업계가 불안해하고 있다. 이 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경영책임자·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핵심 조항이 모호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역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처방안을 놓고 혼란에 빠졌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하청 근로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 대표이사도 질 책임이 초미의 관심사다. 최고 안전책임자를 두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도 대표이사도 징역 1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돼 사망했을 때도 대표이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도 지역산업계를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중대재해법이 산업안전...

보건법상 산업재해와 산재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개념을 혼동, 처벌법위를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역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하다. 기업 관계자들이 법률 컨설팅을 받으려고 해법무법인이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라고 한다. 당초 노동계에서는 기업이 경영책임자의 책임 회피 방안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으나 정작 기업들은 법률의 불명확성과 법을 다룰 조직과 인력이 부족해 더 이를 먹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최근 경총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도 중대재해법에 관한 우려를 일제히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지역산업계의 고민과 불만이 왜 끊이지 않는지 이제라도 차분하게 미비한 점을 다듬고 현실을 살피기 바란다. 법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한다. 밀어붙이는 것만 이 능사가 아니다.

순천 조례호수공원, 시민이 꺼안아야

다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최근 SNS를 통해 '1만 소(畝) 운동'을 제안하며, 조례호수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동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온라인 지지 서명을 독려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호수공원을 만들고 기쁘게 주체는 관이 아닌 시민이었기 때문이다. 조례호수공원은 원래 농업용수를 제공하던 저수지였다. 당시 농업기반공사 소유인 조례저수지를 1991년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이때부터 매립에 반대하고 공원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운동이 15년여 동안 계속됐다. 시민단체는 토론회와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전개하며 매립반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저수지 속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장마철 장대비를 맞으며 투쟁을 지속했다. 내셔널트러스트 운동도 전개했다. 이러한 결과 2004년 순천시장은 조례호수지의 전면 호수공원화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09년 '호수공원'으로 탄생했다. 순천시민의 선택이 된 호수공원은 이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의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것이다.



권동현
시민취재본부 차장

순천시는 조례저수지 일부를 매입해 음악분수와 실개천, 산책데크 등을 조성했고 나머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년 1억 원에 가까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농업용저수지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공공재임에도 법률상 농업용 저수지라는 이유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몇 차례 임차료 지급의 부당함을 주장한 적이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정치적으로 접근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 이에 소의원은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나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제 시민들이 호응하고 나서야 한다. 소 의원이 지민 불씨를 시민들의 동참으로 활활 타오르게 해야 조례호수공원은 온전한 순천시민의 휴식처가 될 수 있다.